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5권 제2호 2002(187-207)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임금결정과정과 소득격차

이 원 호*

요약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의 노동시장을 사례로, 지역노동시장이 갖는 지역성을 임금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외환위기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대도시내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계층간의 사회적 분극화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며 대도시내 노동시장과정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고학력 및 고기능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상승효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대도시에서 산업재구조화와 정보기술의 보급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와 맞물리면서 기술적 · 공간적 불일치에 의한 구조적 실업의 양산과 직종간의 임금격차를 유발하게 되는 것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임금결정과정에 기초한 노동시장과정은 뚜렷한 지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광역시 노동시장내 임금결정과정과 그것이 갖는 소득변화에 대한 영향은 특정 노동시장의 특성, 즉 노동시장의 공급 및 수요구조, 산업구조 및 실업변화 등에 기초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지역정책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는 바로 노동시장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주요어 : 지역노동시장, 임금결정과정, 숙련 분극화, 소득격차, 노동시장정책

1. 서 론

지난 1997년 말 초유의 외환위기를 겪게된 우리나라에서 그 무엇보다도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회적인 문제는 도시내 빈곤의 확대와 사회적 배제의 경험일 것이다. 1999년 유엔개발계획(UNDP)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연구한 "외환위기이후의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감시 시스템"에서 월평균 가계지출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가구의 규모를 1,030만 명으로 추계하였다(김대일 외, 1999). 이러한 규모는 1996년에 추계된 763만 명에 비해 33%나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의 약 22%에 달하는 규모였다. 추정된 빈곤가구의 규모는 물론 사회 및 정치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면서 외환위기가 초래한 새로운 차원의 빈곤문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관심은 사회적 빈곤의 규모에 초점이 주로 두어진 반면, 그 원인과 재생산과정을 포함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심창학, 2001).

빈곤의 현상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향을 가지며, 특히 최근까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나

*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타나는 빈곤가구의 증가는 경제회복의 수혜대상에서 벗어나는 인구의 규모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경제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이루어진 대량해고와 그에 따른 실업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적 안전망이 극히 미비했던 상황속에서 보다 심각한 사회적 빈곤의 재생산 및 심화를 유발시켰다.[1] 이는 실업이 사회적 빈곤과 배제를 창출하고 구조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나타낸다. 최근에 관심의 초점이 모여지는 도시내 신빈곤층의 형성과 확대에 대한 논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외환위기이후 증가하고 있는 계층간의 소득격차나 도시내 새로운 빈곤층의 형성은 실업의 구조화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빈곤의 문제에 대한 지역정책적 접근은 바로 노동시장정책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Fassmann et al., 박영한 · 이정록 · 안영진 옮김, 2002: 304-310). 즉, 지역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연결점은 바로 빈곤과 실업의 문제가 공히 공간적 차원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업과 소득격차에 대한 논의는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그것이 갖는 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부재한 실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는 노동시장의 지역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야 한다. 실업과 빈곤의 재생산문제간의 관련성은 바로 특정 노동시장의 질적 · 양적 특성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결국, 립시(Lipsey)의 선구자적인 연구가 밝힌 것과 같이 지역성을 지닌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지역노동시장으로서 특정 도시 내에 나타나는 빈곤과 실업간의 관련성이 이해되어야 한다.[2]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하에서 우리나라 광역대도시를 사례로 노동시장의 지역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개별 노동시장이 갖는 차별성을 고찰하고, 그러한 차별성이 도시경제내 실업과 빈곤의 문제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지역내 임금결정과정에 초점을 둔다. 지역에 따른 노동시장성과의 차이를 조사함에 있어 임금의 지역간 차이가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지역내 임금결정과정의 분석과 이해는 노동시장의 지역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접근이며, 나아가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을 가능하게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은 그동안 적절한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도시지역내 가구를 대상으로 노동시장활동 및 소득을 조사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의 결과가 발표되어 개인단위에서의 지역노동시장내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3]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발표된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7개 광역대도시의 노동시장내 임금결정과정의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의 지역성을 규명한다.[4] 본 논문은 우선 다음 장에서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간략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고, 나아가 개별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수요와 공급 및 실업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각 광역대도시지역내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경험적인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개별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한다. 제4장은 임금결정과정을 통해 분석된 노동시장의 지역성이 개별 노동시장이 경험하는 빈곤의 재생산과 실업문제에 대한 함의를 논의한다. 끝으로 본 논문은 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로 결론을 맺는다.

2. 임금결정과정과 지역노동시장의 특성

1) 이론적 고찰

지금까지 지역적 차원에서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대부분은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계층간, 산업부문간 및 남녀간 임금격차와 그 요인분석에 초점이 두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임금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이행기의 경제 하에서 임금결정에 미치는 사회주의체제하의 요인이 갖는 관성, 즉 경로의존성의 효과와 새로이 등장하는 운영체제로서의 시장메커니즘의 역할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Peng, 1992; Dong, 1998; Meng, 1998). 특히 Peng의 연구는 시장개혁이후 중국에 등장한 다양한 소유권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결정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임금결정과정의 이원성이 결국 사회적 층화 및 소득의 결정과정상 등장하게 된 이원적 구조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Meng은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남녀간의 임금격차의 발생원인과 그 정도를 수학적 모형과 함께 추정하였다. 이와 함께, Lee(2000)의 연구도 중국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임금결정과 고용관계와 같은 노동시장과정이 소유권제도의 변화에 따른 시장-계획의 이원적 구조에 의해 규정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분극화는 사회주의체제하의 제도적 요인의 경로의존성과 시장메커니즘의 도입간의 함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이원덕 · 정진호(1999)는 우리나라에서 임금의 결정에 있어 시장의 힘과 독립하여 기업의 어느 정도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임금결정시 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내 내부노동시장이 상당히 발달해 있음을 반증한다고 분석하였다.

지역적 차원에서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연구는 지역과학을 중심으로 먼저 전국적인 차원에서 임금-실업의 관련성이 지역간 실업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임금의 변화가 지역간에 적용되는 과정의 이해에 초점을 두어 왔다(Martin, 1981; Abraham, 1996). 또한 지역간의 임금의 수렴 혹은 확산현상에 대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Moore and Rhodes, 1981; Black, 1985). 또한 Church와 Hutchinson (1989)은 기업체자료를 중심으로 지역간의 임금결정이 갖는 특성과 실업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를 사례로 지역내 임금수준의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로서 Lindauer(1983)의 논문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지표로서 노동시장 통합성을 중심으로, 지역간 임금의 결정요인과 격차를 분석하였다. 그는 지역간 임금수준의 격차가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간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금수준에 미치는 입지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노동시장의 통합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연구가 제한적이었던 지역적 차원에서의 임금결정에 대한 분석은 지역간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실업이나 경기변화와 같은 외부의 충격을 받은 지역내 노동시장이 변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왔다(Eberts and Stone, 1992). 그러나 임금결정이 갖는 공간적 소득격차에 대한 의미와 지역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또한 미비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단시간내 급격한 노동시장의 구조변동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구조변동이 소득격차와 함께 사회적 층화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진행되는 상황 하에서는 임금결정과정과 그것이 갖는 지역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특성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취업자수는 2,136만 명이며, 이중 7개 광역시의 취업자수는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1,009만명에 달하고 있다(표 1). 1990년대에 걸쳐 지난 11년 간 광역시의 취업자수는 연평균 약 1.7%의 증가율을 보여왔다. 이는 전국의 평균 증가율 1.5%보다 다소 높지만, 광역시중 서울과 부산의 경우는 각각 0.3%와 0.7%로서 매우 낮은 취업자수의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인천과 대전은 연평균 3.9%의 높은 증가율로 취업자수가 증가하여 왔다.

1997-1998년 간 외환위기로 인한 취업자수의 전국적인 감소는 약 111만 명이었으며, 이중 광역시에서 감소된 취업자수는 37만 명(33.3%)에 달한다. 한편 외환위기이후 취업자수의 회복추세를 보면, 1998-2001년 기간동안 전국의 취업자수는 광역시보다 조금 높은 2.2%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이며, 외환위기 이전의 취업자수준을 회복하였다. 광역시의 경우, 도시별로 취업자의 증가세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서, 취업자의 회복추세가 지역별로 상이하고 결국 경기회복의 성과도 공간적으로 균등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 인천, 광주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 회복세를 보인 반면, 서울과 부산은 외환위기이후 1%대의 낮은 취업자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공급에 기여한 사람(취업과 실업에 분류된 사람)의 비율로서 지역내 노동투입 및 공급의 정도를 나타내

표 1. 연도별 취업자수의 변화

(단위 : 천명)

연도	전국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990	18,085	8,348	4,424	1,525	854	742	403	400	-
1991	18,677	8,709	4,568	1,584	894	802	436	425	-
1992	19,033	8,832	4,574	1,598	923	842	452	443	-
1993	19,328	9,005	4,661	1,597	939	884	459	465	-
1994	19,905	9,305	4,799	1,625	981	929	484	487	-
1995	20,432	9,709	4,880	1,701	1,080	1,022	511	515	-
1996	20,817	9,804	4,898	1,700	1,093	1,054	527	532	-
1997	21,106	9,889	4,907	1,704	1,097	1,087	548	546	-
1998	19,994	9,519	4,452	1,604	1,018	993	494	533	425
1999	20,281	9,584	4,463	1,584	1,036	1,030	500	546	425
2000	21,061	9,929	4,559	1,645	1,077	1,092	526	579	451
2001	21,362	10,091	4,587	1,654	1,104	1,125	547	608	466
증가율	1.5%	1.7%	0.3%	0.7%	2.4%	3.9%	2.8%	3.9%	3.1%
위기이후증가율	2.2%	2.0%	1.0%	1.0%	2.7%	4.2%	3.5%	4.5%	3.1%

자료 : 통계청(kosis.ks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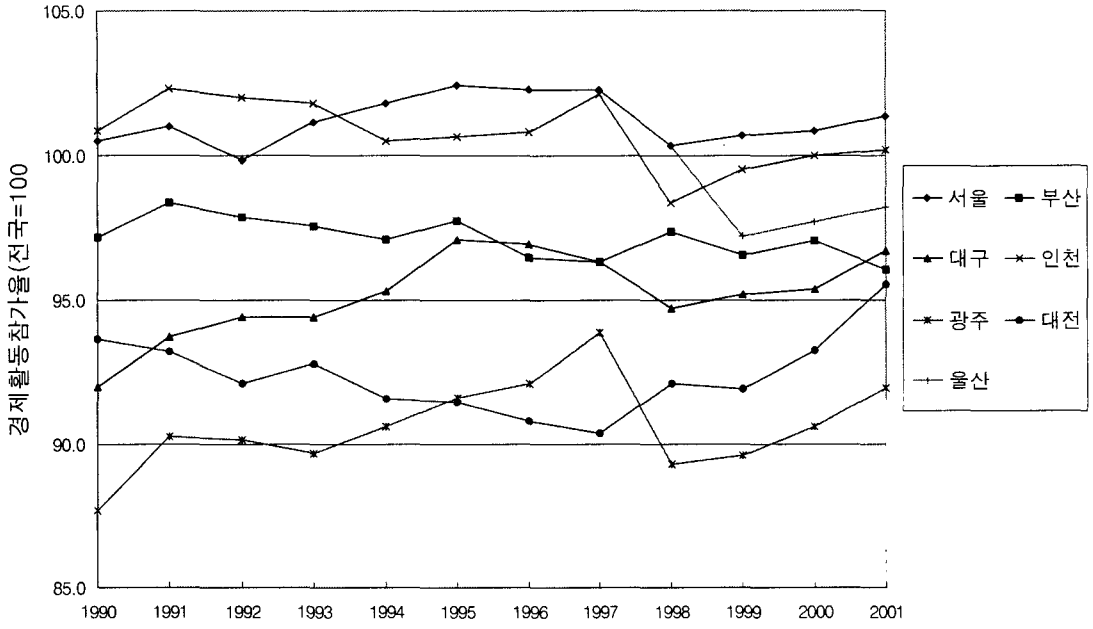

그림 1. 대도시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전국=100)

자료 : 통계청(kosis.kso.go.kr)

며, 일반적으로 지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구조의 특성을 반영한다.[5] 1990년대 이후 광역시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서울과 인천을 제외하고 모두 전국 평균참가율보다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산업화의 투자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전국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그림 1에서 광주와 대전은 부산이나 대구보다 더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서 외환위기이전까지의 경향은 또한 광역시별로 다른 모습을 나타나는데, 광주와 대구의 경우는 전국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했던 반면, 부산과 대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패턴은 개별 노동시장이 갖는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떨어졌던 광역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빠르게 회복되면서 최근까지 전국 평균참가율에 점차 수렴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함께, 개별 광역시 노동시장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 실업률의 변화이다(그림 2). 경제활동참가율과는 달리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의 대부분은 전국의 평균 실업률보다 항상 높은 실업률을 보여준다. 외환위기가 도래한 1997년 4/4분기에서 1998년 1/4분기까지 광역시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으로 근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실업발생이 억제되었던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러한 경향이 반전되어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전국의 평균 실업률에 비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울산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경기회복과 함께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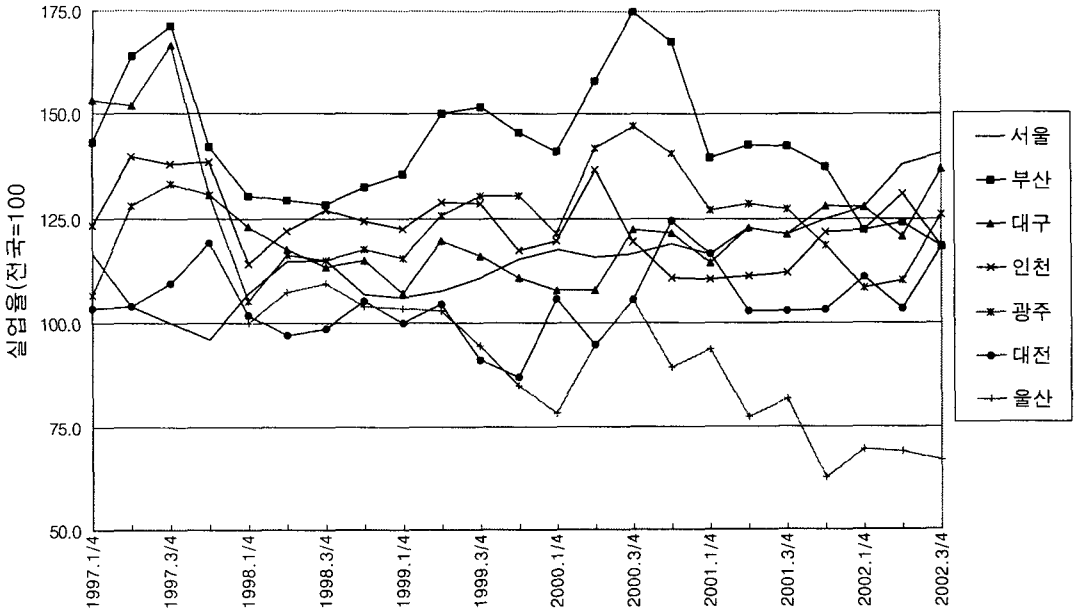

그림 2. 실업율의 변화(전국=100)

자료 : 통계청(kosis.kso.go.kr)

도 급속히 회복되면서 전국평균보다 월등히 낮아졌다.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실업률의 광역시간 수렴경향이다. 외환위기직후 상대적으로 수렴되었던 광역시간 실업률의 모습은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실업률의 도시간 차이가 점차 확산되는 패턴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다시 실업률이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업률의 지역간 수렴현상은 일차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간 평균임금의 차이에 의한 노동력의 이동으로 나타난 노동시장내 적응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역내 노동수요와 관련하여, 1990년대 광역시별 지역총생산의 변화를 고찰하면 표 2와 같다. 전국적으로는 연평균 6.5%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서울과 부산은 각각 4.1%와 3.5%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인천이 광역시중 가장 높은 6.1%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로 대전(5.6%), 광주(5.2%)가 뒤따르고 있다. 외환위기이후인 1998~2000년 기간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생산면에서 연평균 11%를 넘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광역시들 중 인천과 광주만 그에 필적하는 생산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타 광역시들의 경우는 6~9%대의 생산량의 실질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림 3은 전국대비 광역시별 일인당 지역총생산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일인당 지역총생산의 전국평균에 비해 대부분의 광역시의 생산량은 65%~85% 수준에 머물고 있고, 서울과 울산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그림에서 나타내지는 못하였지만, 울산의 생산수준은 공업중심도시의 성격에 맞게 전국평균에 비해 약 2.3배의 높은 수준

표 2. 1990년대 지역총생산의 변화

(단위 : 10억원, 1995년 불변가격)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990	247,735	64,661	19,222	10,690	11,526	6,026	5,774	-
1991	271,371	69,432	20,244	11,201	12,664	6,355	6,422	-
1992	290,692	73,838	20,503	11,703	13,573	6,723	6,973	-
1993	307,769	78,982	21,249	12,407	14,499	7,257	7,384	-
1994	333,114	82,168	22,763	13,532	16,081	7,827	7,719	-
1995	357,722	84,599	24,135	13,918	18,007	8,522	7,935	-
1996	387,506	90,518	25,994	14,780	19,018	8,924	8,394	-
1997	406,622	91,336	25,885	14,782	19,458	9,210	9,097	-
1998	376,717	83,006	23,,919	13,010	16,728	8,027	8,546	19,226
1999	425,345	90,895	25,693	14,152	19,251	9,142	9,299	21,634
2000	465,488	97,057	27,035	14,822	20,897	10,013	9,945	22,881
증가율	6.5%	4.1%	3.5%	3.3%	6.1%	5.2%	5.6%	9.1%
위기이후증가율	11.2%	8.1%	6.3%	6.7%	11.8%	11.7%	7.9%	9.1%

자료 : 통계청(kosis.ks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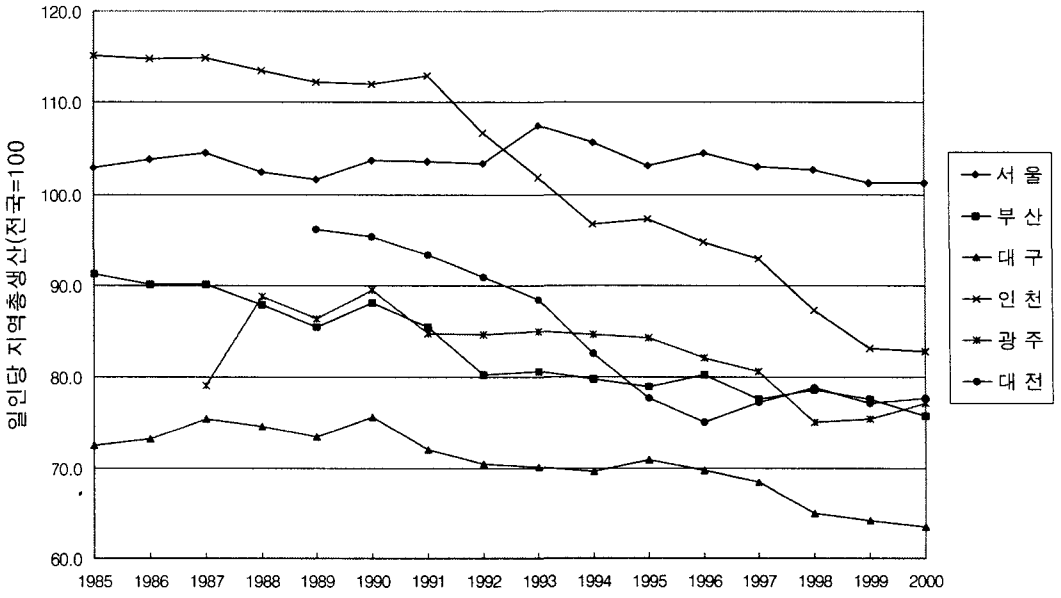

그림 3. 일인당 지역총생산의 변화(전국=100)

자료 : 통계청(kosis.kso.go.kr)

표 3.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1992년, 2001년)

(단위 : 천명)

광역시		합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전기·운수·창고·금융
전국	1992	19,033	2,998	4,923	4,860	11,111	1,663	4,433	3,374	1641
		100.0%	15.8%	25.9%	25.5%	58.4%	8.7%	23.3%	17.7%	8.6%
	2001	21,362	2,193	4,219	4,199	14,950	1,575	5,820	5,444	2,110
		100.0%	10.3%	19.8%	19.7%	70.0%	7.4%	27.2%	25.5%	9.9%
서울	1992	4,574	21	1,246	1,243	3,307	438	1,296	1,082	491
		100.0%	0.5%	27.2%	27.2%	72.3%	9.6%	28.3%	23.7%	10.7%
	2001	4,587	9	845	842	3,734	356	1,423	1,440	514
		100.0%	0.2%	18.4%	18.4%	81.4%	7.8%	31.0%	31.4%	11.2%
부산	1992	1,598	24	548	546	1,026	127	447	278	173
		100.0%	1.5%	34.3%	34.2%	64.2%	7.9%	28.0%	17.4%	10.8%
	2001	1,654	33	371	371	1,250	119	517	404	210
		100.0%	2.0%	22.4%	22.4%	75.6%	7.2%	31.3%	24.4%	12.7%
대구	1992	923	17	287	286	619	80	271	187	82
		100.0%	1.8%	31.1%	31.0%	67.1%	8.7%	29.4%	20.3%	8.9%
	2001	1,104	29	272	272	803	83	348	278	94
		100.0%	2.6%	24.6%	24.6%	72.7%	7.5%	31.5%	25.2%	8.5%
인천	1992	842	11	360	359	472	73	178	133	87
		100.0%	1.3%	42.8%	42.6%	56.1%	8.7%	21.1%	15.8%	10.3%
	2001	1,125	15	341	341	769	87	310	256	116
		100.0%	1.3%	30.3%	30.3%	68.4%	7.7%	27.6%	22.8%	10.3%
광주	1992	452	39	91	89	322	48	124	106	43
		100.0%	8.6%	20.1%	19.7%	71.2%	10.6%	27.4%	23.5%	9.5%
	2001	547	33	68	68	445	51	173	163	59
		100.0%	6.0%	12.4%	12.4%	81.4%	9.3%	31.6%	29.8%	10.8%
대전	1992	443	22	90	89	331	59	124	104	45
		100.0%	5.0%	20.3%	20.1%	74.7%	13.3%	28.0%	23.5%	10.2%
	2001	608	15	83	83	509	55	198	190	66
		100.0%	2.5%	13.7%	13.7%	83.7%	9.0%	32.6%	31.3%	10.9%
울산	1998	425	15	168	167	242	27	103	76	38
		100.0%	3.5%	39.5%	39.3%	56.9%	6.4%	24.2%	17.9%	8.9%
	2001	466	20	180	180	267	29	103	93	42
		100.0%	4.3%	38.6%	38.6%	57.3%	6.2%	22.1%	20.0%	9.0%

자료 : 통계청(kosis.kso.go.kr)

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일인당 지역총생산은 전국대비 63%의 수준으로서 가장 낮으며, 그 뒤를 부산, 광주, 대전, 인천이 뒤따르고 있다. 일인당 지역총생산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은 서울과 울산을 제외하고, 1990년대를 지나면서 광역시의 생산수준이 전국평균에 비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1990년~2000년 기간동안 일인당 지역총생산의 전국평균은 연평균 10%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모든 광역시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생산량의 증가를 보였다. 광역시의 지역총생산의 상대적 감소는 1990년대 가속화되어온 대도시의 성장에 따른 인구증가, 주요 생산시설의 교외이전으로 인한 생산량의 상대적 감소 등과 같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전국 및 광역시의 산업별 고용분포는 지역별 노동수요의 패턴과 그 변화를 나타낸다(표 3). 전국적으로 제조업은 1992년에 25.5%를 차지하였으나 2001년에는 20%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그 비중이 같은 기간동안에 58.4%에서 70%로 대폭 높아졌다. 이러한 비중의 증가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부문의 성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산업별 취업자의 비중의 증감에 대한 전국적인 경향은 개별 광역시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그러나 취업자의 산업별 구조와 그 변화에서는 광역시별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서울, 대전, 광주는 전통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의 취업자를 갖고 있으며, 2001년 현재에도 모두 82~84%의 취업자가 동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통적인 공업중심지인 인천과 울산은 1992년 모두 56%의 취업자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었다. 2001년까지 인천에서는 동 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자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전국 평균에 근접한 반면, 울산에서는 여전히 그 비중이 57%를 조금 넘어 변화의 폭이 극히 미비하다. 이는 제조업의 감소라는 탈산업화가 인천의 경우, 1992~2001년 기간동안에 급속도로 진행되어 온 반면, 울산의 제조업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산업별 취업자의 분포와 함께 지역노동시장의 수요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직업별 취업자의 분포이다(표 4). 1993~2001년 기간동안 취업자의 구조변화를 보면, 우선 고기능 사무직의 비중은 3% 증가한 반면, 고기능 생산직과 저기능 생산직의 경우 각각 6%와 3%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6] 또한 저기능 사무직의 경우, 사무직원의 경우는 1% 감소하였지만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의 경우는 5% 정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1990년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변동의 특징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첫째, 산업별 취업자분포에서 고찰한 바대로 우리나라 대도시의 탈산업화현상은 직종별 분포에서 나타난 생산직의 감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생산직에서 숙련기능 근로자와 조작·조립원 모두 뚜렷한 감소를 보여왔다. 둘째, 생산직에서의 탈산업화현상과 아울러 사무직에서도 뚜렷한 양극화현상이 나타났다. 고용구조면에서 고숙련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해 온 반면, 사무직과 같은 보다 낮은 숙련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왔다. 이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화 및 정보통신과 같은 신기술의 도입에 따라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온 반면, 나머지 작업들은 하향 조정되어 중간 숙련인력들은 저숙련 노동력으로 대체되면서 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직종별 양극화현상은 외환위기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에서

표 4. 직업별 취업자의 분포(1993년, 2001년)

(단위 : 천명)

		합계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직원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 직근로자
전국	1993	19,328	524	887	1,492	2,419	4,041	2,561	2,813	2,466	2,125
		100%	3%	5%	8%	13%	21%	13%	15%	13%	11%
	2001	21,362	546	1,449	2,008	2,529	5,646	2,073	2,608	2,314	2,188
		100%	3%	7%	9%	12%	26%	10%	12%	11%	10%
서울	1993	4,661	187	318	558	839	1,125	14	642	540	438
		100%	4%	7%	12%	18%	24%	0%	14%	12%	9%
	2001	4,587	177	462	683	642	1,254	7	677	282	403
		100%	4%	10%	15%	14%	27%	0%	15%	6%	9%
부산	1993	1,597	46	68	105	223	384	25	286	276	183
		100%	3%	4%	7%	14%	24%	2%	18%	17%	11%
	2001	1,654	33	95	130	192	503	23	304	213	162
		100%	2%	6%	8%	12%	30%	1%	18%	13%	10%
대구	1993	939	31	47	73	111	212	10	179	170	106
		100%	3%	5%	8%	12%	23%	1%	19%	18%	11%
	2001	1,104	28	69	77	130	350	28	145	158	119
		100%	3%	6%	7%	12%	32%	3%	13%	14%	11%
인천	1993	884	25	29	61	136	167	8	200	149	107
		100%	3%	3%	7%	15%	19%	1%	23%	17%	12%
	2001	1,125	21	51	128	124	301	13	178	191	119
		100%	2%	5%	11%	11%	27%	1%	16%	17%	11%
광주	1993	459	9	32	43	66	110	29	62	56	52
		100%	2%	7%	9%	14%	24%	6%	14%	12%	11%
	2001	547	11	47	51	70	173	30	58	55	51
		100%	2%	9%	9%	13%	32%	5%	11%	10%	9%
대전	1993	465	14	36	35	58	129	9	76	51	57
		100%	3%	8%	8%	12%	28%	2%	16%	11%	12%
	2001	608	14	57	52	80	200	15	68	63	61
		100%	2%	9%	9%	13%	33%	2%	11%	10%	10%
울산	1998	425	7	22	42	58	90	14	60	92	40
		100%	2%	5%	10%	14%	21%	3%	14%	22%	9%
	2001	466	7	25	48	52	105	20	63	97	51
		100%	2%	5%	10%	11%	23%	4%	14%	21%	11%

자료 : 통계청(kosis.kso.go.kr)

보다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고용분포상의 양극화는 임금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대도시내 계층 간의 소득격차에도 뚜렷한 극화현상을 야기시키게 된다고 본다.

전국적인 직업별 취업자의 분포가 갖는 특징은 개별 대도시에서도 대체로 적용되지만 그 정도면에서는 매우 차별적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고급 숙련사무직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서울(6%)과 인천(6%)과 같이 수도권에서 탁월하다. 수도권에서의 고급 숙련사무직에 대한 탁월한 수요증대는 사무직에 대한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요감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울산은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수요가 정체되어 왔다. 생산직의 감소현상도 지역적으로 상당히 차별적이다. 농어업을 제외한 숙련기술 생산직의 경우, 인천(-7%), 대구(-6%), 대전(-5%)에서 그에 대한 수요감소가 매우 높은 반면, 서울에서는 오히려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저기능 생산직의 경우도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1993~2001년 기간동안 감소하였지만, 그 수요감소의 크기는 광역시별로 매우 다양하다.

지금까지 7개의 개별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구조를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제 특성을 고찰하였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은 이전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구조적 변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현재까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동은 매우 두드러진다. 그러한 변화중 특히 수요구조면에서의 양극화현상은 장기적으로는 1990년대에 걸쳐, 단기적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이후 빠르게 심화되어 왔다. 이는 나아가 직종별 임금의 불균등현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결국 대도시내 중산층의 감소와 더불어 계층간의 소득양극화 및 격차심화현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 장에서는 임금의 불평등현상과 그것이 갖는 지역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지역노동시장내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3. 지역노동시장의 임금결정과정

1) 임금자료 및 분석과정

(1) 동시장특성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노동시장자료는 1997년 이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하여 온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 중 우리나라 광역대도시에 해당하는 자료 일부분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과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이 논문에서는 2000년도 자료 중 광역시에 속하는 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에 기초한 광역대도시의 노동시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총 응답자수는 2,020명이며 이중 남자는 1,262명(62.5%)이고 여자는 758명(37.5%)이다.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만 37.6세이며, 월평균 임금액수는 114만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45.1%는 서울에 거주하며, 그외 부산(17.6%), 대구(10.4%), 대전(5.9%) 등의 순으로 분포한다. 근로자의 학력별 분포를 보면, 전문대졸이 가장 많은 4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대학원졸(24.0%), 고등학교졸(14.3%), 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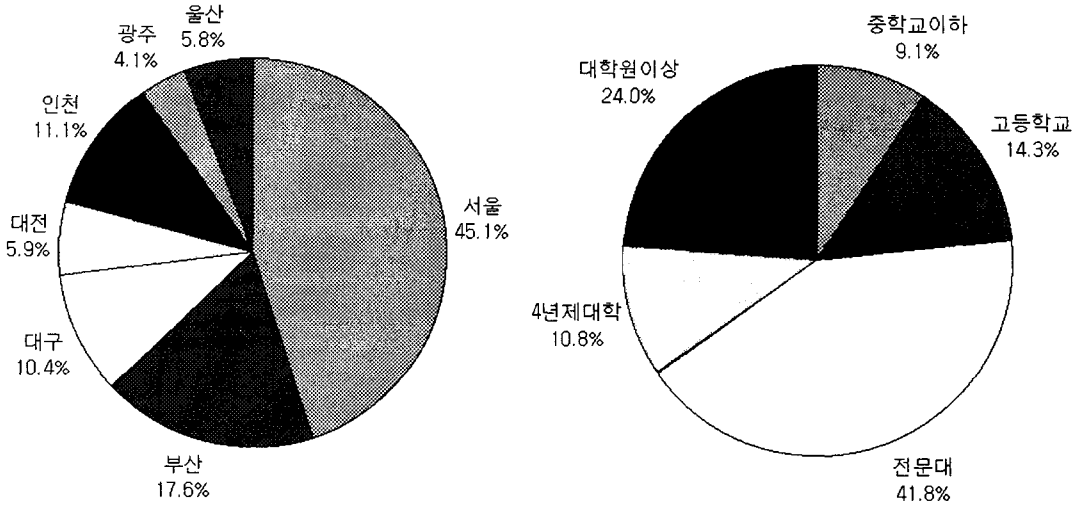

그림 4. 응답자의 지역별, 학력별 분포

표 5. 광역시별 월평균임금액수

(단위 : 만원)

광역시	월평균임금액	최소임금액	최대임금액	변이계수
서 울	123.8	40.0	650.0	0.543
부 산	103.6	40.0	380.0	0.525
대 구	95.3	40.0	300.0	0.479
대 전	116.8	40.0	350.0	0.560
인 천	101.4	40.0	270.0	0.416
광 주	110.8	40.0	350.0	0.545
울 산	127.2	40.0	330.0	0.558
합 계	114.1	40.0	650.0	0.539

제대학교졸(10.8%), 중학교졸이하(9.1%)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한편, 대학원졸이상의 근로자중 56.4%에 해당하는 273명의 응답자는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응답한 근로자의 근로시간형태는 대부분 전일제(92.8%)이며, 시간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6.7%에 불과하다. 이는 고용형태면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조사된 근로자는 대부분 상용직(79.2%)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외 임시직은 10.8%, 일용직은 10.0%로 나타났다. 임금결정방식도 대부분 월급(80.0%)형태로 지불되며, 그외 일당제와 연봉제가 각각 9.6%, 3.6%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된 근로자의 대부분(80.3%)은 민간 혹은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정부 및 기타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12.5%를 차지하고 있다.

광역시별 월평균 임금 중 울산이 127.2만원으로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인 서울은 123.8만원

표 6. 근로자의 광역시별 학력별 분포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전문대	4년제대학	대학원이상	합계
서울	71	105	375	86	274	911
	7.8%	11.5%	41.2%	9.4%	30.1%	100.0%
부산	42	67	145	33	68	355
	11.8%	18.9%	40.8%	9.3%	19.2%	100.0%
대구	28	47	69	30	36	210
	13.3%	22.4%	32.9%	14.3%	17.1%	100.0%
대전	12	10	50	17	31	120
	10.0%	8.3%	41.7%	14.2%	25.8%	100.0%
인천	10	31	123	26	34	224
	4.5%	13.8%	54.9%	11.6%	15.2%	100.0%
광주	11	11	26	10	24	82
	13.4%	13.4%	31.7%	12.2%	29.3%	100.0%
울산	9	18	56	16	18	117
	9.1%	14.3%	41.8%	10.8%	24.0%	100.0%
합계	183	289	844	218	485	2,019
	7.7%	15.4%	47.9%	13.7%	15.4%	100.0%

이다. 그 뒤로 대전(116.8만원), 광주(110.8만원), 부산(103.6만원) 등이 뒤따르고 있다. 지역별 임금액의 격차정도를 고찰하기 위하여 변이계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대전이 개인간 임금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울산, 광주, 서울 등이 뒤따르고 있고, 인천이 가장 낮은 개인간 임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에 따라 근로자의 학력수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5).[7] 서울의 근로자중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중은 30.1%로서 전체 광역시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 또한 광주, 대전, 울산 등도 높은 대학원졸 이상의 고급인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는 전문대졸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의 경우는 그 비중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대구와 같이 근로자의 학력별 분포가 균등한 편이다.

(2) 임금결정과정 분석모형설정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은 우선 신고전경제학의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ies)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인적자본이론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노동수입 혹은 임금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정도, 즉 학교교육연수와 직장경험의 정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적자본이론의 전형적인 임금공식을 따라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임금결정과정을 정의한다. 일반적인 임금공식에서 연령은 직업경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며, 연령과 소득간의 체감적인 관계와 교육에 따른 체증적인 소득증가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연령과 교육연수의 제곱값을 포함한다. 연령변수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임금공식에서 현재 기업에서의 근무연수가 고려된다. 순수한 근무연수의 효과는 과거의

직업경험에 의한 소득효과와는 별도로 현재의 기업에 머무름으로써 얻게되는 소득효과, 예를 들어 현재의 기업에 기여하는 특정한 인적자본특성의 효과를 나타내 준다.

시장경제 하에서 임금의 남녀격차는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성별 임금격차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도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의미 있는 일이다. 직업은 또한 인적자본요소와 소득간의 매개적인 연결고리일 뿐만 아니라 소득에 대한 독립적인 결정요인이기도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임금결정과정은 다음과 같은 임금공식으로 나타난다.

$$\ln(W) = a + b_1Age + b_2Age^2 + b_3FT + b_4FT^2 + b_5Gen + b_6Edu_1 + b_7Edu_2 + b_8Edu_3 + b_9Edu_4 + b_{10}Ocu_1 + b_{11}Ocu_2 + b_{12}Ocu_3 + \varepsilon$$

공식에서 ln(W)는 월평균임금의 로그값이며, Age와 Age^2는 각각 근로자의 연령과 연령의 제곱값이다. FT와 FT^2는 현재 기업에서의 근속년수(firm tenure)와 그 제곱값을 의미하며, Gen은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서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기록되었다. Edui는 근로자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로서 중학교졸이하를 생략범주(omitted category)로 삼아 각각 고등학교졸, 전문대졸, 4년제대학교졸, 대학원졸이상에 해당하는 변수들이다. Ocui는 또한 근로자의 직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로서 앞에서 분류한 방식에 기초하여 저기능 생산직을 생략범주로 삼아, 각각 고기능 사무직, 저기능 사무직, 고기능 생산직에 해당하는 변수들이다. 끝으로 ε는 잔차이다.

임금공식에 기초한 회귀분석은 먼저 전국단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행하였으며, 이때 임금결정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지역성을 임금결정과정을 통해 살펴보기 위하여, 개별 광역대도시 자료를 토대로 동일한 임금공식에 기초한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위에서 정의된 임금공식에서 독립변수들은 모두 평균임금과 정(正)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계수값도 모두 양수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 임금결정요인과 평균임금간의 관계도 광역시별로 차별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공식에 포함된 주요변수들의 광역시별 평균값을 보면, 지역별로 다양함을 알 수 있다(표 7). 울산은 월평균임금수준이 가장 높지만, 지역내 임금의 차이도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근로자의 평균연령에서 부산이 가장 높으며, 인천이 36.7세로서 가장 낮다. 평균 근속연수 면에서는 울산이 8.3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는 일반적으로 울산의 높은 임금수준과 밀접히

표 7. 주요 변수들의 광역시별 평균값

구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월평균 임금액수	114.1 (61.5)	123.8 (67.2)	103.6 (54.4)	95.3 (45.6)	116.8 (65.4)	101.4 (42.2)	110.8 (60.4)	127.2 (71.0)
연령	37.6 (11.1)	37.4 (11.2)	39.0 (10.9)	37.4 (10.8)	37.7 (10.8)	36.7 (11.1)	37.3 (12.6)	37.7 (9.9)
근속년수	6.2 (6.7)	6.1 (6.5)	6.7 (7.4)	4.9 (5.3)	7.6 (8.0)	5.5 (6.2)	5.6 (6.5)	8.3 (7.2)

주 : 괄호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 대구는 4.9년으로서 전국적인 평균 근속연수 6.2년에 비해 매우 낮다.

2) 분석결과: 임금결정과정과 차별성

지역별로 임금공식에 기초한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8에 나타나 있다. 우선 전국적인 자료에 기초한 회귀분석결과, 거의 대부분의 계수들이 양수이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만 20세에서 추가되는 1세마다 월평균임금은 3.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5년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추가되는 1년의 근속연수에 따라 월평균임금은 1.7%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녀간의 임금격차도 높게 나타나는데 모든 것이 동일할 경우, 남자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여성근로자보다 41.2%나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여타 OECD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학력별 임금격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중학교이하 근로자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자는 9.6%, 전문대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20.7%의 임금상승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전문대 졸업자에 비해 오히려 1.6%의 임금감소가 추정된다. 이는 최근에 나타난 대학졸업자의 공급과잉과 잠재실업자의 양성현상을 반영한다고 사료된다. 끝으로 석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는 4년제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약 22%의 임금상승이 기대된다. 한 개인의 직업도 월평균임금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저기능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때, 고기능 사무직의 경우는 35.8%, 저기능 사무직의 경우는 16.7%의 임금증가가 추정된다. 고기능 생산직의 근로자도 또한 3.9%의 임금상승효과가 기대되지만 그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8. 임금결정과정 분석결과

	전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상수	2.789 *	2.813 *	1.867 *	4.067 *	2.908 *	3.333 *	4.111◆	3.548 *
연령	0.057 *	0.061 *	0.090 *	-0.003	0.024	0.033 †	0.017	0.013
연령^2	-0.001 *	-0.001 *	-0.001 *	0.000	0.000	0.000◆	0.000	0.000
근속년수	0.020 *	0.003	0.001	0.092 *	0.056 *	0.023 †	-0.066	0.056 *
근속년수^2	0.000	0.000	0.000	-0.002 †	-0.001 *	-0.001	0.002	-0.001
성별	0.345 *	0.369 *	0.383 *	0.118	0.302 *	0.383 *	0.224	0.358 *
고등학교졸	0.092	0.076	0.223	-0.175	0.463 *	-0.054	0.136	0.048
전문대졸	0.280 *	0.302 *	0.329 †	-0.004	0.515 *	0.084	0.789	0.202
4년제대학졸	0.265 *	0.280 †	0.373◆	0.092	0.543 *	0.084	0.097	0.282
대학원졸이상	0.460 *	0.530 *	0.349◆	0.112	0.744 *	0.162	0.373	0.391 †
고기능사무직	0.306 *	0.300 *	0.464 *	0.109	0.379 *	0.165 †	0.477	0.227◆
저기능사무직	0.155 *	0.138◆	0.452 *	-0.154	0.117	0.096	-0.169	0.002
고기능생산직	0.038	0.021	0.074	-0.060	0.096	0.025	0.188	0.070
R^2 조정값	0.170	0.183	0.161	0.113	0.556	0.367	-0.085	0.556
자료수	2,013	908	354	210	119	224	81	117

주 : * 유의수준 0.01에서 유효; † 유의수준 0.05에서 유효; ◆ 유의수준 0.10에서 유효

임금결정과정에서 임금결정요인의 영향은 광역시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과를 담고 있는 위의 표는 개별 광역시의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매우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에 대해 모두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령에 따른 임금상승효과는 부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 뒤를 서울과 인천이 따르면서 거대도시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이들 대도시들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편이며, 연령이 대체로 직업년수를 반영한다고 볼 때, 연령의 증가가 갖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상승효과는 그만큼 현재의 기업이 근로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에 대해 지불하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근속년수에 의한 임금상승효과는 개별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축적된 인적자본보다는 현재 기업에 계속 남아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적 혜택, 즉 현재의 기업에 고유한 인적자본특성의 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분석의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울산과 대구와 같이 특정 산업 및 부문으로 보다 특화된 지역에서 추가되는 근속 년수의 임금상승효과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기대된다.

교육의 정도는 인적자본에 대한 주요한 투자형식이며, 임금수준을 상당히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그 형태도 광역시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서울의 경우, 전국적인 패턴과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임금수준은 전문대 졸업자보다 낮게 추정된다. 그러나 이외의 경우 모두 교육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며, 또한 임금상승이 체증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는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수준의 상승효과는 같지만, 임금상승은 점차 체감하면서 결국, 석사이상의 졸업자의 경우는 4년제 대학교 졸업자보다 오히려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전의 경우도 부산과 같이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상승과 상승폭의 체감이 나타나지만, 석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4년제 대학교 졸업자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대전은 중학교졸 이하의 근로자에 비해 학력의 상승에 따른 임금상승효과가 여타 광역시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결국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내 임금격차를 결과하게 되었다(표 5).

근로자가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 임금의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또한 분명한 지역성을 지니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무직의 임금은 생산직의 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8] 비록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지만 저기능 생산직에서 고기능 생산직으로 나아갈수록 임금상승효과가 뚜렷하다. 또한 고기능 생산직에서 저기능 사무직으로 바뀔 때에도 임금상승이 뚜렷한데, 특히 부산의 경우가 그러하다. 아울러 저기능 사무직에서 고기능 사무직으로 옮겨감에 따른 임금상승도 모든 대도시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도시규모의 성장에 따른 도시노동시장내 숙련의 분극화현상은 서울과 대전의 경우 상대적으로 뚜렷하여 사회적 분극화와 도시내부의 분화과정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지만, 여타 대도시의 경우는 그러한 분극화현상이 분명하지 못하다(Fassmann and Meusburger, 박영한 · 이정록 · 안영진 옮김, 2002: 294-296 참조).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인적자본, 연령 및 직업 등 임금요인에 의한 임금결정과정은 지역적으로 뚜렷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4. 토론 : 임금결정과정의 지역성과 공간적 소득격차의 이해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광역시에 따라 임금결정과정이 상당히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활동참가율이 비교적 높은 대도시일수록 직업년수의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효과가 높게 나타난 반면, 산업이나 특정 부문으로 특화된 대도시일수록 현재의 직장에 고유한 인적자본의 임금상승효과가 높게 예측되고 있다. 교육수준과 직종이 임금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도 지역별로 상당히 차별적이지만, 대도시성장에 의해 나타나는 도시노동시장내 숙련분극화현상은 현재 일부 광역시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노동시장과정의 지역성은 외환위기이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변동을 이해하고 또한 대처하는데 두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노동시장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산업지리학이나 경제지리학처럼 지역산업정책 혹은 도시계획과 같은 정책적 수단과의 파트너쉽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지역정책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의 위상정립이 부재하여 왔다. 대부분의 선진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실업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중심과제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병리현상으로만 취급되어 왔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관계에 기초한 비공식적 사회안전망의 발달과 아울러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자본과 노동의 생산요소의 투입을 통한 외연적 확대(extensive growth)를 추구해온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성 때문에 실업의 문제는 항상 경제정책상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이후 실업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하여 학술적으로나 정책상 많은 관심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지만, 2002년 현재는 실업수준이 다시 빠르게 감소하면서 그러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처럼, 현재의 실업률 감소는 실질적인 실업인구의 감소라기보다는 취업을 포기하는 인구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서 외환위기이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실업률은 훨씬 높아진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해체와 공식적인 사회안전망의 미발달,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대를 통한 직업안정성의 감소, 노동시장내 숙련의 분극화 등 1990년대를 거치면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내 구조적 변동은 실업문제와 같이 중요한 연구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정책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의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역정책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의 부재에 기여한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발전특성뿐만 아니라 경제지리학내 노동부문 및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가 전통적으로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도 해당한다. 이는 경제지리학적 연구일반이 갖고 있는 생산부문을 중시하는 편견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동안 많은 연구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내 다양한 문제들은 모두 특정 노동시장내 지역성을 매개로 발현되는 것이다. 실업의 문제도 많은 경우 노동의 수요와 공급간 공간적 불일치(spatial mismatch)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지식기반경제하의 지역발전전략 및 산업클러스터 발전전략도 그 핵심에는 지식의 수용자로서 노동력 시장의 발전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지리학에서 노동시장의 연구의 필요성이 현재 매우 높으며, 지역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연결점으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환위기이후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는 실업, 특히 청년실업의 문제와 도시내 빈곤 및

소득격차의 문제도 바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매개로 규정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고찰한 바대로 광역시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숙련의 분극화현상은 도시내 산업의 재구조화와 맞물리면서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의 증대를 초래하게 되었고, 아울러 직종간의 임금의 격차를 결과하게 되었다. 분극화현상은 또한 노동시장의 수요면에서 기술적 불일치(skill mismatch)와 공간적 불일치로 인하여 도시내 구조화된 실업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Green, 2001).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분극화는 대도시내 사회적 층화 및 빈곤의 재생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관계들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숙련의 분극화와 그것이 갖는 실업 및 소득격차에 대한 관계는 개별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위의 분석에서처럼 우리나라 광역대도시별로도 숙련의 분극화현상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술 및 인적자본투자에서 유래되는 임금효과도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한 차이점에 대한 적확한 설명은 개별 노동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다. 다만 노동시장의 수요 및 공급구조와 임금결정과정과 같은 노동시장과정이 갖는 지역성에 비추어, 노동시장정책에 사용되는 소수의 거시경제적 지표에 의한 노동시장문제의 이해와 그에 대한 대처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논문의 연구에서 보았듯이, 임금결정요인의 영향은 광역시별로 매우 다양하며, 또한 기술의 숙련 및 교육과 관련된 인적자본요인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별 임금요인의 영향이 공간적으로 다양한 만큼 지역노동시장내 수요 및 공급의 변화와 임금결정과정 그리고 그것들이 갖는 임금과 소득변화에 대한 이해는 개별 노동시장이 갖는 지역성에 대한 설명에 기초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지역성은 빈곤과 실업과 같은 지역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지역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관련 지우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5.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의 노동시장을 사례로, 지역노동시장이 갖는 지역성을 임금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대도시내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계층간의 사회적 분극화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며 대도시내 노동시장과정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 논문은 최근에 이용가능해진 도시주민에 대한 노동 및 소득에 관한 종단면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광역대도시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임금결정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노동시장내 주요한 구조변화인 숙련의 분극화현상이 임금 및 소득격차에 대해 갖는 관계와 그것이 갖는 지역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임금결정과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전체적으로 고학력 및 고기능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상승효과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대도시에서 산업재구조화와 정보기술의 보급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변화와 맞물리면서 기술적·공간적 불일치에 의한 구조적 실업의 양산과 직종간의 임금격차를 유발하게 되는 것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임금결정과정에 기초한 노동시장과정은 뚜렷한 지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광역시 노동시장내 임금결정과정과 그것이 갖는 소득변화에 대한 영향은 특정 노동시장의 특성, 즉 노동시장의 공급 및 수요구조, 산업구조 및 실업변화 등에 기초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전국적인 수준에서 고려되는 제반 노동시장의 요인에 기초한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이해와 노동시장정책은 이러한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지역정책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이 올바로 정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는 바로 노동시장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주

1)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안 사회경제적으로 실업문제로부터 상당히 벗어나 있었던 우리나라는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한지 1년 정도만에 실업률이 약 9%에 달하면서 실업자의 수가 178만 명을 기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988년에 2.5%를 기록함으로써 최초로 2%대의 낮은 실업률로 진입한 이후 1997년까지 10년 동안 2%대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은 급등하기 시작하여 1998년 3/4분기의 경우 7.7%에 달하는 등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실업대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실업의 발생은 경제위기이전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웠던 2~3%의 실업률을 유지했었다는 점에 비추어 상당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발생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급속한 경기회복과 집중적인 실업대책의 효과로 인해 실업률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2) Lipsey(1960)는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를 이용하여 실업과 지역임금의 변화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후 국민경제는 다양하며 수많은 국지적 노동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3)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동시장관련 전국규모 조사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구조특별조사」, 노동부의 「노동력유동실태조사」 및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등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통계조사들은 모두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횡단면적(cross-sectional) 조사로서 노동시장의 정지된 그림(snapshot view)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동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노동시장 이동과정, 소득과 소비의 변화 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패널조사는 횡단면 조사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면서 동적인 차원에서 가구와 개인의 장기간에 걸친 변화와 상태간 이동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횡단면 자료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심도 있는 정책연구 및 정책평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www.kli.re.kr/klips).

4) 본 연구에서 광역대도시에 연구의 초점을 둔 것은 외환위기이후 노동시장의 변동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 대도시지역이며, 특히 도시와 농촌지역간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도시와 농촌지역을 함께 분석하는 것은 그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5) 전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비를 조참가율이라 하고,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비를 순참가율이라 한다. 현재 국제노동기구 통계연감에서는 조참가율을 사용하고 있다.

6) 직업분류에서 분석의 편의상 먼저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는 고기능 사무직으로, 사무직원과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는 저기능 사무직으로,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를 고

기능 생산직, 그리고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과 단순노무직근로자를 저기능 생산직으로 재분류한다.

7) Pearson Chi-Square Test의 값은 96.0(유의수준 0.000)이다.

8) 저기능 사무직의 임금이 고기능 생산직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들 경우 모두 회귀계수의 값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참 고 문 헌

김대일 · 안주엽 · 양준모 · 신관호, 1999, 경제위기와 실업구조의 변화,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박영한 · 이정록 · 안영진 (역), 2001, 노동시장의 지리학, 서울: 도서출판 한울.

심창학, 2001,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4(3), pp.178-208.

이원덕 · 정진호, 1999, "임금결정과 기업의 역할," 노동경제논집 22(2), pp.61-75.

Abraham, F., 1996, "Regional adjustment and wage flexibility in the European Union,"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6, pp.51-75.

Black, B., 1985, "Regional earnings convergence : the case of Northern Ireland," *Regional Studies* 19, pp.1-7.

Church, A. and Hutchinson, G., 1989, "Wage determination in Britain: Is there a local dimension?," *Regional Studies* 23(4), pp.289-300.

Dong, X., 1998, "Employment and wage determination in China's rural industry: investigation using 1984~1990 panel dat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26, pp.485-501.

Eberts, R.W. and Stone, J.A., 1992, *Wage and Employment Adjustment in Local Labor Market,* Kalamazoo, MI: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Green, A.E., 2001, "Unemployment, nonemployment, and labor-market advantage," *Environment and Planning A* 33, pp.1361-1364.

Lee, W., 2000, *Wage Effects of Marketization : Industrial Reform, Labor Market and Inequality in Post-reform Chin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Lindauer, D.L, 1983, "Regional wage determination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pp.129-141.

Lipsey, R.G., 1960, "The relation between unemployment and the rate of change of money wage rates in the United Kingdom 1862~1956: a further analysis," *Economica* 27, pp.1-31.

Martin, R.L.(ed.), 1981, *Regional Wage Inflation and Unemployment,* London: Pion.

Meng, X., 1998, "Male-female wage determination and gender wage discrimination in China's rural industrial sector," *Labor Economics* 5, pp.67-89.

Moore, B., and Rhodes, J., 1981, "The convergence of earnings in the regions of the United Kingdom," in Martin, R.L.(ed.), *Regional Wage Inflation and Unemployment,* London: Pion, pp.46-59.

Peng, Y., 1992, "Wage determination in rural and urban China: A comparison of public and private industrial sector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 pp.198-213.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 5, No. 2, 2002(187-207)

Wage Determination Process and Income Disparity in Korean Metropolitan Cities

Wonho Lee*

**Research Fellow,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wonholee@dreamwiz.com)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wage determination process of regional labor marke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gional dimension of labor market processes in Korean metropolitan cities.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late 1997, the interplay between labor market restructuring such as unemployment and skill polarization and income disparity has been shaped by the labor market process in the metropolitan cities. This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fact that both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expanding information technologies in the metropolitan region have reshaped the labor demand structure and finally resulted in structural unemployment due to skill mismatch and spatial mismatch and wage inequality across different occupations. In addition, since wage determination process clearly has a regional dimension, wage determination and its influence on income profile in a certain regional labor market need to be understood by investigating its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including labor supply and demand structure, industrial changes, changing unemployment, etc. This is why labor market policy as a regional policy needs to be redefined and it can be much enhanced by geographical investigation on regional labor market.

Key words : regional labor market, wage determination process, skill polarization, income disparity, labor market policy